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Analysis of religious organizations'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2001~2003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결과 과소지원과 시설간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소지원으로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5,565억원, 2003년)의 구성은 정부지원금이 약 57%, 이용자부담금이 약 16%,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과 잡수익 등이 약 16%, 그리고 종교계지원금이 약 1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계의 지원금규모가 복지시설 전체세입의 약 10%로 이는 시설이용자가 서비스공급원가 보다 저렴하게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약6%) 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은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의 지원의지 등의 부족으로 생각된다.

다음 지원금 분포를 보면, 연간 5백만원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시설이 전체시설의 29.4%인 반면, 5천만원이상을 받는 시설이 약 33.3%로 나타났다. 종교계의 지원금에 대한 상하위시설간(양극단의 약30%) 격차는 1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의 주된 원인은 각 시설별 공급규모(종사자 수, 생활자 수, 시설규모 등)와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에 대한 지원의지 등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종교계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과소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의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비한 점진적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자체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간 지원금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종단간 자원배분의 협의체 구성 또는 결연운동을, 종단별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의 운동전개가 요구된다.

1. 들어가는 말

최근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자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복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복자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복지 혼합(Welfare Mix)이 강조되었다. 민간부문 중에서도 사회복지 수행에 적합한 것은 종교기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종교계의 역할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여 정부와 보완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종교계도 인적, 물적, 그리고 시설자원을 보유한 조직으로서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즉 종교계는 생활 또는 주거가 불충분한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용시설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에 참여하여 왔다. 이러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정도를 총괄적이면서 재원별로 조명함으로써 종교계의 참여정도를 살펴볼 수 있고, 다른 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다. OECD가 요구하는 총사회복지지출을 연구하기 위해 종교계의 참여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교계가 운

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지원 분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는 국내통계이용자들의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통계생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사실시와 확대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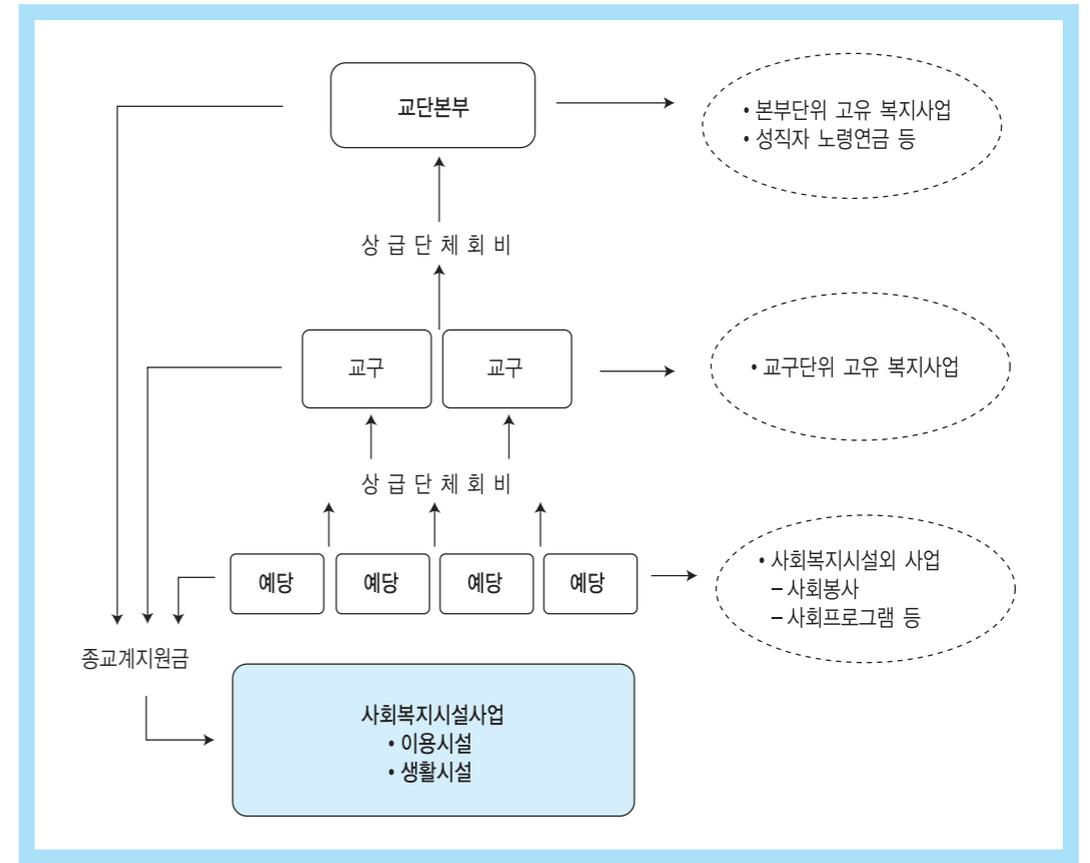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범위는 ‘사회복지참여’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는 크게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업과 종교기관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인 사회복지시설 외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외사업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사업은 복지시설에 국한함으로써 조사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음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외사업은 프로그램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조사범위의 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외사업은 현실적으로 모집단자료의 수집 어려움과 아울러 연구의 예산 및 시간제약도 관련된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구체적 자료수집 범위를 보면, 교단본부와 교구 그리고 예당¹⁾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지원금사업으로 한정하였다(그림 1 참조). 즉 교단, 교구 또는 예당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신고 및 미신고 시설 포함)에 지원하는 재원에 국한하였으며 여기에는 법인 전입금, 사회시설후원금 등이 있다. 참고로 연구범위에서 벗어난 사회복지시설 외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예당의 재정지출로는 사회봉사비(노인학교 운영, 무료급식, 쌀 등 현물지원, 북한 돕기 등)와 사회프로그램 운영비(긴급구호, 영세민 돕기, 노인 잔치 등)²⁾ 등이 있다. 다음 교단·교구의 재정지출로는 교단본부 고유의 사회복지사업(본부단위의 고유복지사업, 노후복지(성직자 연금))과 교구단위의 고유복지사업 등이다. 끝으로 예당의 직접적인 사회봉사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복지시설 수는 2003년 말 기준 4,048개이다. 이중 종교계가 운영 하는 사회복지시설 수는 2,162개로 우리나라 전체시설의 5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시설수는 1,891개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조사대상 부적합시설 271개소가 제외된 것이다. 제외된 이유는 시설명칭이 다르지만 동일시설이거나

그림 1.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의 흐름과 통계생산 범위



주: 음영부분이 본 연구의 범위임.

나 회계상 비독립적 시설이거나 시설폐쇄 등 때문이다.

조사대상시설 1,891개소에 대해 종단별, 시설종류별, 그리고 시설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단별로 살펴보면 기독교가 893개(47.2%), 천주교 450개(23.8%), 불교 402개(21.2%), 원불교 75개(3.9%), 그리고 그외종교 71개(3.8%)로 나타났다. 다음 시설종류별로 보면, 생활시설 1,023개(54.1%)와 이용시설 868

개(45.9%)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시설유형별로 보면 신고시설 1,144개(60.5%)와 미신고시설 747개(39.5%)로 분포되어 있다(표 1 참조). 조사기간은 조사표 회수가 부진하여 5개월 동안(2004.11.10~2005.4.10) 실시하였다.

조사표 회수는 전체조사대상시설 1,891개소 중 956개로 회수율은 50.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응답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규

1) 종교계의 기초 조직단위인 기독교의 (개)교회, 구세군의 영문, 가톨릭의 본당, 불교의 (개)사찰, 원불교의 교당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예당'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예당이란 종파를 초월하여 신도들이 예의를 다하여 의식을 치르는 기초단위(장소)로 정의한다.

2) 이외에도 예당운영비(인건비, 시설관리비, 기타예당운영비 등), 선포)교비(인건비, 활동비 등), 지방교회 지원금, 그리고 상회비(기독교(노회, 총회)), 불교(교구본사, 총무원)등이 있음.

표 1.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2004): 조사시설

(단위: 개, %)

		계	기독교 ¹⁾	천주교	불교 ²⁾	원불교	그외종교 ³⁾
계 (%)		1,891 (100.0)	893 (47.2)	450 (23.8)	402 (21.2)	75 (3.9)	71 (3.8)
생활 시설	소 계	1,023	555	297	101	25	45
	신고시설	368	129	128	64	23	24
	미신고시설	655	426	169	37	2	21
이용 시설	소 계	868	338	153	301	50	26
	신고시설	776	259	143	299	50	25
	미신고시설	92	79	10	2	-	1

주: 1) 장로회,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등
 2)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3) 재림교, 천도교, 기타 등
 자료: 각 종단의 내부자료, 2004.

모가 아니라 전체시설의 지원금 규모를 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표 기회수시설로부터 발견하여 미회수시설의 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에 반영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미회수시설은 전체시설 중 5차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시설들을 의미한다.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요인은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변수들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요인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생활시설의 경우 공급측면으로는 종사자수와 시설유형(신고시설 또는 미신고시설)을, 수요측면으로는 생활자 수로 나타났다. 다음 이용시설의 경우 공급측면의 요인만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종사자 수와 시설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 추정을 위한 승수는 요인변수의 그룹화를 통해 얻었다. 이들 변수는 종교계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종류, 시설유형, 종사자 수, 생활자 수, 그리고 조사표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변수의 그룹화 과정에서 각 그룹내의 종속변수(종교계의 지원금 규모)의 이상점(outlier)은 승수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각종 통계치는 요인변수의 그룹화를 통한 확대승수(Inflator)를 반영한 값들이다.

3. 분석결과

1)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총세입 규모 및 구성

우리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총세입규

모는 2001년 약 4,575억원, 2002년 약 5,165억원, 그리고 2003년에는 약 5,565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시설당 평균세입은 3.0~3.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재원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2년에는 약 12.8%, 2003년에는 약 7.7%로 연간 10% 내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재원의 구성을 보면, 정부지원금이 약 57%, 이용자부담금이 약 16%,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과 잡수익 등이 약 16%, 그리고 종교계지원금이 약 10%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종교계의 지원금은 복지시설 전체세입의 약 10% 내외(10.6~12.0%)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지시설의 이용자부담금(16%)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은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의 지원의지 부족 등으로 생각된다.

시설별 총세입규모의 분포를 보면, 1천만원 미만의 시설이 전체시설의 12%, 1~2천만원 미만이 13.6%, 2~3천만원 미만이 11.8%, 3~4천만원미만이 10.6%, 4~6천만원 미만이 15.6%, 6천만원~1억원미만이 17.5%, 1억원 이상이

표 2.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2001~2003)

(단위: 억원)

	2001	2002	2003
전체세입(억원)	4,575	5,165	5,565
시설당평균(억원)	3.0	3.2	3.4
전년대비증가율(%)	-	12.8	7.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2005.

표 3.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 및 구성: 재원별·연도별

(단위: 백만원, %)

	2001	2002	2003
계 (n)	457,514 (100.0) (851) ^{f)}	516,517 (100.0) (851)	556,492 (100.0) (851)
정부지원금 ¹⁾	260,933 (57.0)	292,612 (56.7)	318,657 (57.3)
종교계지원금 ²⁾	54,864 (12.0)	58,065 (11.2)	59,009 (10.6)
이용자부담금 ³⁾	73,515 (16.1)	79,829 (15.5)	87,594 (15.7)
기타 ⁴⁾	68,202 (14.9)	86,011 (16.7)	91,232 (16.4)

주: 1)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 포함.
 2) 종단본부·교구·예당·종교계 법인 등의 지원금 포함.
 3) 시설이용자의 부담금
 4)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 잡수익, 전년도이월금 등 포함.
 5) 조사표의 일부 항목이라도 응답한 시설의 수는 956개이지만, 조사표의 모든 항목을 응답한 시설 수는 851개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2005.

18.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세입액에 대한 상하위시설간 격차는 1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시설간 세입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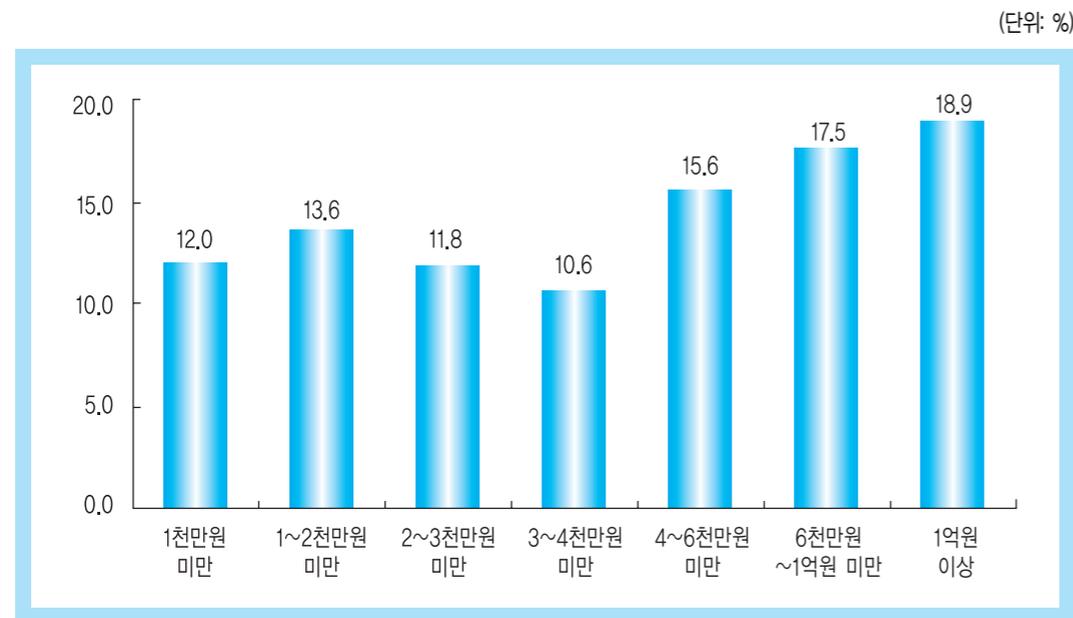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는 2001년에 548억원, 2002년에 580억원, 그리고 2003년에 약 59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시설당 평균지원금은 약 4천만원(3.6~3.9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전년대비 증가율은

1.6~5.8%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종교계의 지원금 비중은 1.4%(2003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분포를 보면, 2003년도 연간 500만원이하의 시설이 29.4%, 1,000만원이하가 38.3%, 2,500만원이하가 52.4%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중 약 50%가 종교계로부터 연간 2,500만원이하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계의 지원금에 대한 상하위시설간 격차는 1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시설간 지원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종교계로부터 연간 5

그림 2.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3)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2005.

표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2001~2003)

	2001	2002	2003
지출규모	54,864	58,065	59,009
시설당평균지원금	36	38	39
작년대비증가율(%)	-	5.8	1.6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 대한 비율(%)	1.5	1.5	1.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2005.

백만원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시설이 전체시설의 29.4%인 반면, 5천만원이상을 받는 시설이 약 33.3%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체시설 중 양 극단의 약 30%의 시설들은 10배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주된 원인은 시설별 공급규모(종사자 수, 생활자 수, 시설규모 등)의 차이와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 지원의지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규모를 종단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전체 590억원 중 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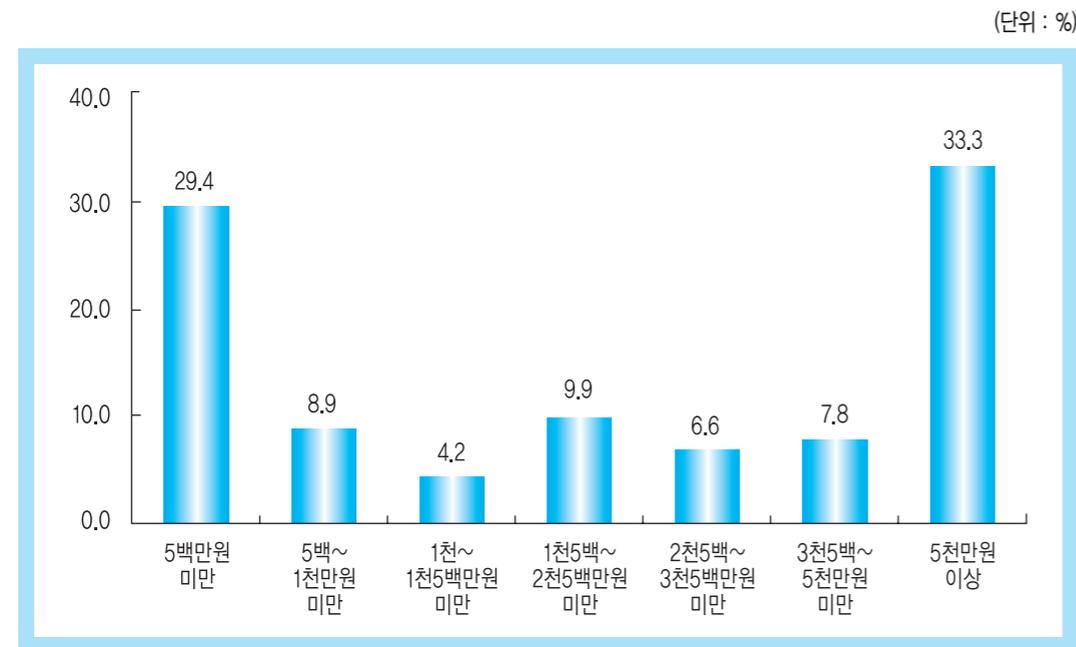
교가 279억원(47.3%), 기독교가 170억원(28.7%), 불교가 97억원(16.5%) 순이며, 원불교와 그 외종교가 각각 약 9억원(1.5%), 약 36억원(6.0%)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종단이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 대부분(92.5%)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을 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2003년 기준)은 서울 165억원, 경기 100억원, 부산 42억원, 대구 33억원의 순이며, 울산이 1억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시설 수의 분

표 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의 분포(2003)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백만원미만	29.4	30.2	27.1	29.0	36.1	33.3
5백~1천만원미만	8.9	7.2	5.7	15.0	11.1	8.3
1~1천5백만원미만	4.2	4.7	2.4	5.6	2.8	5.6
1천5백~2천5백만원미만	9.9	11.3	6.1	12.6	8.3	8.3
2천5백~3천5백만원미만	6.6	8.2	6.9	3.7	8.3	5.6
3천5백~5천만원미만	7.8	8.2	5.7	7.5	13.9	13.9
5천만원이상	33.3	30.2	46.3	26.7	19.5	25.1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2005.

그림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의 분포(200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2005.

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전국 분포를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23.0%), 경기(16.9%), 부산·대구(4.3%)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0.5%)다.

4. 맺는 말

최근 복지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복지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강조되고 있다. 민간부문으로는 사회복지 수행에 적합한 종교기관들의 역할이 점차 높아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아래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실태를 분석한 결

과 과소지원과 시설간 심한 편중현상이 발견되었다. 먼저 종교계의 지원금규모는 복지시설 전체세입의 약 10%로 복지시설의 이용자부담금(약16%) 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은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의 지원의지 부족 등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체의 과반수 시설들(52.4%)이 종교계로부터 낮은 지원금(연간 2,500만원이하, 2003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당 평균지원금이 약 3천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 과소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의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비한 점진적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시설간 지원금의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간 지원금의 분포를 보면, 종교계로부터 연간 5백만원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시설이 전체시설의 29.4%인 반면, 5천만원이상을 받는 시설이 약 33.3%로 나타났다. 즉 종교계의 지원금에 대한 상하위시설간 격차는 1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간 지원금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설간 지원금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종교계별 자원배분의 협의체 구성 또는 결연운동을, 종단별 공동복지기금 조성의 운동전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점차 사회복지분야에 참여와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원의 확충과 자원배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